

NEWS “광양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급”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영광출신’ 김혜영 이사장 임명

김혜영 농촌미래연구소 이사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김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과 새롭게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당 강령과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심의, 국회 의안 심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발굴,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김 부의장은 영광군 군서면이 고향으로 영광중앙초와 영광여중을 졸업하고, 경기 대학교에서 관광학박사를 취득했다. 청암대와 광주여자대학 교수, 영광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남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여 년간 농어촌지역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임신·출산·육아 정보 한곳에
통합플랫폼 ‘전남아이톡’ 오픈

전남도가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전남아이톡’ 개발을 마무리하고 1일 오픈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분산됐던 국가, 도, 시군 기관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도 지원사업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 개발에 힘써왔다.

‘전남아이톡’에선 300여개가 넘는 국가, 도, 시군 기관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등 8개의 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1월에는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및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전남아이톡’은 인터넷 포털에서 ‘전남아이톡’을 검색하거나 운영서버 (<https://italk.jeonnam.go.kr>)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앱에도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철강산업 편중 위기 심화…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지정팬 국비 보조율 확대·경영안정자금 융자우대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신청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 신청은 광양시의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이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산업 편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제 수입 증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며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국가산단 1차 급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주요 제품 매출이 모두 감소했으며,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신규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광양읍 주요 상권 공실률은 17.2%로, 전국 평균 10.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신청과 함께 2026

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71억 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강 R&D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노후산단 재생 및 AX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담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광양시의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며 “정부의 선제적 개입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역산

업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대상 최대 1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보통교부세 가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폭넓게 적용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는 10월 중 산업부 현자심사, 11월 중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KTX호남선 공정은행 요청

김윤덕 장관 면담…도시교통 인프라 지원 등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호남선 공정은행’ 등 광주시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급선무로 ‘KTX 호남선의 차별 없는 공정 은행’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 광산구의회, 시민 등과 함께 ‘KTX 호남선 차별·불공정 해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실현 가능한 3단계 해법을 담은 KTX 은행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에 재차 KTX 호남선 공정 은행을 요청하고, 이밖에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현재 KTX 호남선은 공급 한계로 철도 이용과 생활 인구 유입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호남선 공정 은행은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 LH 직접 시행,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광주 신산업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지역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건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광주 현안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0

광주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정상 추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상복합개발 사업과는 무관
현대백화점그룹, ‘더현대 광주’ 당초 계획대로 착공 예정

광주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상복합개발과는 별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시공사의 주상복합개발 사업 포기 소식에 따라 동일 부지 내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건립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현대백화점그룹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상복합개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7월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열고 이달 착공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광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현대 광주’는 북구 임동 옛방직공장 부지내 연면적 27만2955㎡, 영업면적 10만890㎡,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 총 주차대수 2652대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이는 광주 도심 최초의 대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

시 이용 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 ‘신속·투명·공정’ 3대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 심의 등 통상 19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11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착공 일정을 앞당겼다.

이승규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7월 착공 보고회에서 시민들께 약속드린 일정에 현재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더현대 광주’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것이며, 광주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0@gwangnam.co.kr

▶1면 ‘뒷발 공천률’서 계속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도 곧바로 지방자치혁신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호남의 경우 관리당원과 일반 국민의 선거인단 반영비율을 50대 50이 아닌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경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후보선출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광주시당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서 광주전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도 변수다.

민주당은 현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에 대해 도덕성, 의정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 등에 대해 평가해 이

중 하위 20%는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역 평가는 타 지역보다 뒷발인 호남에서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배출한 5명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 누가 하위 20%에 해당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총선에서 작동됐던 ‘천명(천이재명)’ 인센티브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경선에서도 적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천정(천정철)’ 수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기초·광역 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혁신당과 진보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광주전남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내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눈길이 쏠린다.

내일의 꿈을
꿈꿔가십시오

너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다원인쇄물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궁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물루선 검색